

이달의 초점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와 사회통합 인식 변화

|이태진·우선희·김지원|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

|이원진|

코로나19의 건강영향과 정부의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 격차

|김동진|

코로나19 전후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인식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사회통합 인식<sup>1)</sup>

The Economic Shock of COVID-19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받은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도 낮았다. 사회통합 인식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을 강화하였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1 들어가며

코로나19는 노동시장과 가구의 소득 및 소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였고(이종관, 2020), 가구의 소득과 소비도 상당히 줄어들었다(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이승호, 홍민기, 2021; 여유진 외, 2021a, 제5장, 제6장).

1) 이 글은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의 제4장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 가구의 소득 감소 및 빈곤 증가가 두드러졌다(남재현, 이래혁, 2020).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긴급재난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에 따라 긴급재난지원 효과의 크기를 추정된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긴급재난지원이 소비를 증가시켰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김미루, 오윤해, 2020; 홍민기, 2020; 남재현, 이래혁, 2021; 이승호, 홍민기, 2021;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또한 긴급재난지원이 소득 충격을 완화하고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하였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여유진 외, 2021a, 제6장).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고용, 소득, 소비 같은 객관적인 경제적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하는 집단이 많아지고 빈곤 및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낮아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을 충분

히 받고 만족한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다.

## 2 주요 변수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용한다. 첫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나타내는 변수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과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을 활용한다. 우선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임금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전 1년과 코로나19 이후 시점에 대해 각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 대금 연체, 공공금 미납, 집세 미납, 저금·보험 해지, 대출 등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1년 동안에는 경험이 없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경험이 있을 때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변화한 것으로 정의한다.

**[표 1]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변수**

문항	내용
코로나19 발생 이후(2020년 2월 이후) 그 이전에 비해 귀하의 근로소득(임금, 사업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없다</li> <li>• 비해당(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없었음)</li> </ul>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09. <표 4-2>.

**[표 2]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변수**

문항	내용	
	코로나19 이전 1년 (2019년 2월~2020년 1월)	코로나19 이후 (2020년 2월~현재)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집세(월세 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자가, 전세, 무상의 경우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적금 및 보험 등이 없는 경우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 있다/없다 • 비해당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 있다/없다	• 있다/없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하였는지 여부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09. <표 4-3>.

**[표 3]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변수**

문항	조사 대상	내용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중 전 국민(또는 전 도민,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특정 대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응답자	• 예/아니오
정부 지원금에 귀하는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 매우 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 불만족
귀댁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 매우 타당하다/대체로 타당하다/약간 부당하다/매우 부당하다/모르겠다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0. <표 4-4>.

**[표 4] 사회통합 인식 변수**

문항	내용
귀하는 한국 국민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 1~4점 연속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0~10점 연속변수 • 점수가 높을수록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코딩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0. <표 4-5>.

둘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변수를 활용한다. 해당 변수는 1차 긴급재난 지원금이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응답자에게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였는지를 조사한 변수(이하 '지원 만족도')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응답자에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변수(이하 '미지원 수용도')를 함께 활용한다.

셋째, 사회통합 인식 변수로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활용한다.<sup>2)</sup>

### 3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표 5〉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

(단위: %)

구분	전체 집단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		
	감소 경험 있음	감소 경험 없음	2020년 2월 전 일자리 없었음	감소 경험 있음	감소 경험 없음	
전체	27.1	51.7	21.2	34.4	65.6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16.0	84.0	0.0	16.0	84.0
	임시·일용·특고 <sup>3)</sup>	49.9	50.1	0.0	49.9	50.1
	고용주·자영업자	71.3	28.7	0.0	71.3	28.7
	무급가족종사자	24.6	75.4	0.0	24.6	75.4
	실업자	13.9	36.1	50.0	27.9	72.1
	비경제활동인구	3.3	21.7	75.0	13.1	86.9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32.0	40.4	27.6	44.2	55.8
	중하층	29.7	50.6	19.7	37.0	63.0
	중간층	24.0	55.4	20.7	30.2	69.8
	중상층·상층	22.3	57.8	19.9	27.8	72.2

주: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3. 〈표 4-8〉의 일부.

2)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b, p. 63), 이태진 외(2022, pp. 39-40) 등의 사회통합 연구에서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와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사회통합도 문항으로 분석하였다.

3) 임시직·일용직과 특수고용노동자를 하나의 범주로 정의한 것은 이태진 외. (2022)의 전체 분석들을 따른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지만, 별도로 분석하기에는 사례 수가 충분하지 않다.

전체 집단에서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은 27.1%,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지 않은 비율은 51.7%,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없어서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없었던 비율은 21.2%였다.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34.4%였다. 즉 2020년 2월 전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3분의 1은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고용주·자영업자의 3분의 2 이상이,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의 절반이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표 6〉에서는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카드 대금 연체, 공과금 미납, 집세 미납, 적금·보험 해지, 대출 등의 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코로나19 이전 1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에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는 비율은 1.9%포인트,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는 비율은 0.9%포인트, 집세가 밀린 적이 있는 비율은 0.6%포인트,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는 비율은 3.2%포인트,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는 비율은 3.7%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한 비율이 7.8%로 나타

**〔표 6〕 코로나19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단위: %, %포인트)

구분	(A) 코로나19 이전 1년			(B) 코로나19 이후			(B-A)		
	경험	미경험	비해당	경험	미경험	비해당	경험	미경험	비해당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연체한 적이 있다.	1.6	98.4		3.6	96.4		1.9	-1.9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통신비,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1.3	98.7		2.2	97.8		0.9	-0.9	
집세(월세·일세)가 밀린 적이 있다. (자가, 전세, 무상의 경우 비해당)	0.8	32.8	66.4	1.4	30.9	67.7	0.6	-1.9	1.3
비해당 제외	2.3	97.7		4.3	95.7		2.0	-2.0	
돈이 필요해 적금 및 보험을 해지한 적이 있다. (적금 및 보험 등이 없는 경우 비해당)	3.0	86.6	10.4	6.1	84.0	9.8	3.2	-2.6	-0.6
비해당 제외	3.3	96.7		6.8	93.2		3.5	-3.5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돈이 필요해 금융기관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청한 적이 있다.	3.3	96.7		7.0	93.0		3.7	-3.7	

주: 사례 수는 3939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8. 〈표 4-12〉.

**[표 7]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전체		7.8	92.2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2	94.8
	임시·일용·특고	12.8	87.2
	고용주·자영업자	15.8	84.2
	무급가족종사자	6.7	93.3
	실업자	5.4	94.6
	비경제활동인구	4.0	96.0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8.8	91.2
	중하층	9.4	90.6
	중간층	6.7	93.3
	중상층·상층	3.1	96.9

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 5개 항목 중 하나라도 코로나19 이전 '없음'에서 코로나19 이후 '있음'으로 변화하였으면 '있음', 그렇지 않으면 '없음'으로 정의하였음.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9. <표 4-13>의 일부.

났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중하층의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다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하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의미한다. <표 8>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비율은 19.9%로 나타났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정부 지원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과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지원 경험 비율이 각각 48.6%, 39.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형태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단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과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표 8]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단위: %)

구분		지원받았음	지원받지 않았음
전체		19.9	80.1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6.6	93.4
	임시·일용·특고	22.1	77.9
	고용주·자영업자	59.5	40.5
	무급가족종사자	26.5	73.5
	실업자	9.0	91.0
	비경제활동인구	10.3	89.7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18.5	81.5
	중하층	22.1	77.9
	중간층	18.7	81.3
	중상층·상층	17.9	82.1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48.6	51.4
	없음	8.5	91.5
	일자리 없었음	10.9	89.1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39.0	61.0
	없음	18.2	81.8

주: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19. <표 4-15>의 일부.

**[표 9]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8.9	40.3	47.5	3.3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5.6	46.9	42.4	5.0
	임시·일용·특고	10.2	41.7	45.7	2.3
	고용주·자영업자	9.3	40.2	47.4	3.1
	무급가족종사자	13.8	25.0	57.3	4.0
	실업자	0.0	24.3	75.7	0.0
	비경제활동인구	9.3	36.7	50.7	3.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0.3	45.5	29.7	4.6
	중하층	7.9	39.8	50.2	2.1
	중간층	7.2	39.7	48.9	4.2
	중상층·상층	3.0	34.7	61.3	1.0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9.3	42.3	45.9	2.5
	없음	9.9	39.2	45.5	5.3
	일자리 없었음	4.8	30.9	60.6	3.8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11.7	56.9	27.9	3.5
	없음	8.4	37.3	51.1	3.2

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사례 수는 821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25. <표 4-17>의 일부.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표 9) 만족한다는 응답은 47.5%,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3%,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을 대상으로 미지원에

대한 수용도를 분석한 결과(표 10)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은 2.4%, 대체로 타당하다는 응답은 40.4%, 약간 부당하다는 응답은 38.0%, 매우 부당하다는 응답은 9.8%였다.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 경험자의 미지원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클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도

**[표 10]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수용도**

(단위: %)

구분		모르겠음	매우 부당	약간 부당	대체로 타당	매우 타당
전체		9.4	9.8	38.0	40.4	2.4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7.8	6.7	37.8	44.8	2.8
	임시·일용·특고	8.2	16.6	41.7	32.2	1.4
	고용주·자영업자	6.8	20.9	40.1	30.4	1.7
	무급가족종사자	7.7	10.1	55.1	27.2	0.0
	실업자	4.1	11.6	38.2	41.1	5.0
비경제활동인구		13.7	8.2	35.3	40.6	2.3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9.5	15.9	42.2	32.4	0.0
	중하층	9.2	10.2	40.0	39.6	0.9
	중간층	9.1	7.6	36.3	43.0	4.1
	중상층·상층	14.1	9.3	26.5	44.9	5.2
근로소득 감소 경험	있음	7.0	17.1	42.1	32.6	1.3
	없음	8.0	8.2	38.7	42.6	2.5
	일자리 없었음	14.8	8.3	32.9	40.9	3.0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경험	있음	17.9	19.0	45.3	16.3	1.5
	없음	8.9	9.2	37.5	42.0	2.5

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사례 수는 3118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26. <표 4-18>의 일부.

낮은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5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

다음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를 살펴해보았다. <표 11>과 <그림 1>을 살펴보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의 평균은 2.99점이었다.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비경제활동인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간층·중상층·상층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코로나19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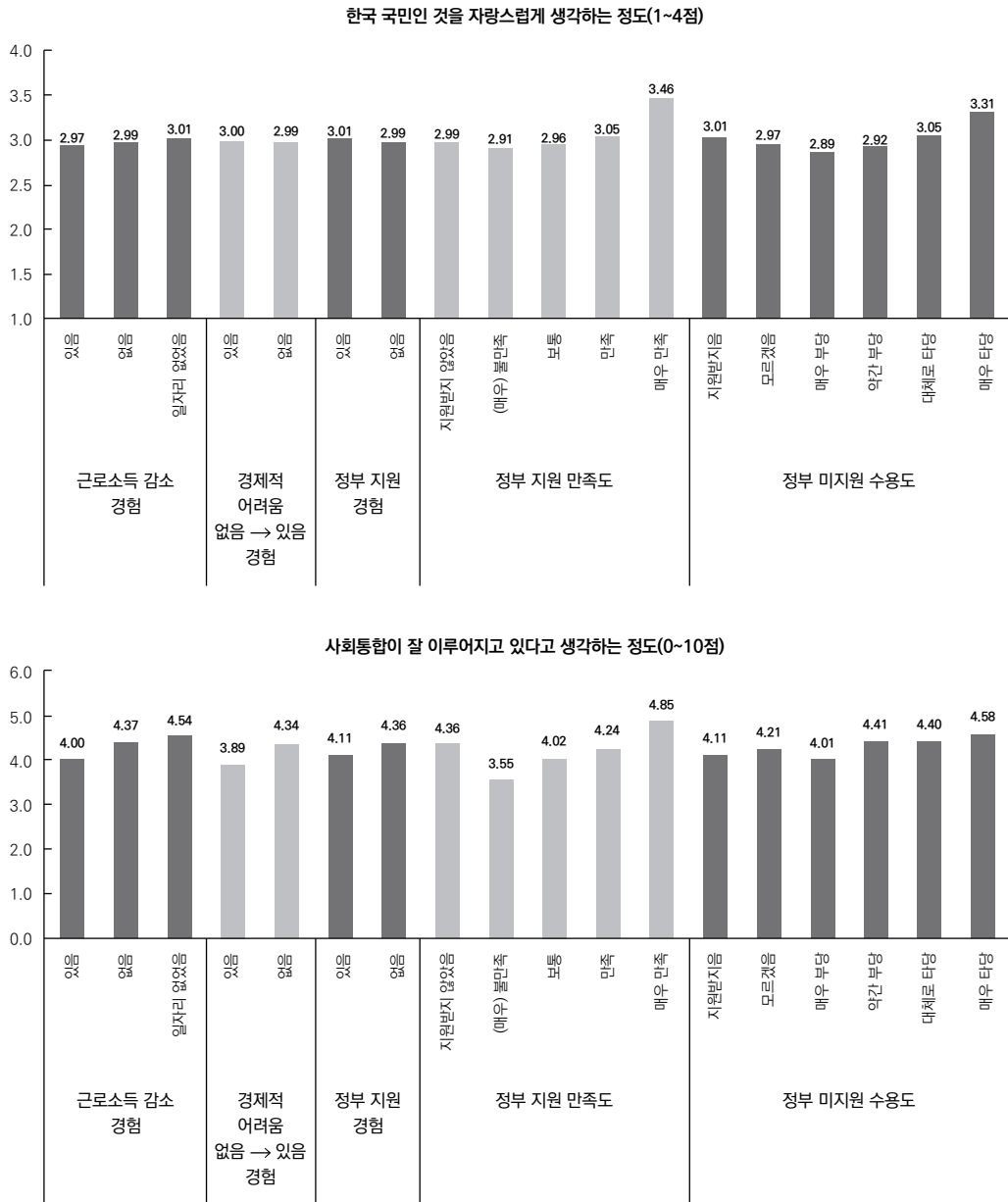
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정부 지원에 만족할수록, 정부 미지원을 수용할수록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정도의 평균은 4.31점이었는데, 상용직, 비경제활동인구, 주관적 소득계층 중상층·상층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정부 지원 경험이 경제적 충격의 영향을

[표 11] 사회통합 인식

구분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1~4점)	우리나라가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0~10점)
		평균	평균
전체		2.99	4.31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상용직	2.97	4.38
	임시·일용·특고	2.93	4.03
	고용주·자영업자	3.03	4.07
	무급가족종사자	3.07	4.15
	실업자	2.96	3.86
	비경제활동인구	3.02	4.52
주관적 소득계층	하층	2.92	4.14
	중하층	2.93	4.27
	중간층	3.05	4.35
	중상층·상층	3.12	4.72

주: 전체 사례 수는 3939명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p. 130-131. <표 4-20>의 일부.

[그림 1] 사회통합 인식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32. [그림 4-4].

대리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부 미지원 수용도가 높을수록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는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하였지만, 코로나19의

[표 12] 사회통합 인식 관련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1~4점)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0~10점)		
		전체 집단	정부 지원 경험자	정부 지원 비경험자	전체 집단	정부 지원 경험자	정부 지원 비경험자
근로소득 감소 경험 (참조 집단: 있음)	없음	0.05 (0.03)	0.13 * (0.06)	0.01 (0.03)	0.21 * (0.10)	0.35 (0.20)	0.17 (0.12)
	일자리 없었음	0.01 (0.05)	0.10 (0.11)	-0.04 (0.06)	0.36 * (0.17)	0.18 (0.49)	0.35 (0.18)
경제적 어려움 없음→있음 경험 (참조 집단: 있음)	없음	-0.04 (0.04)	-0.01 (0.07)	-0.08 (0.04)	0.29 * (0.12)	0.13 (0.22)	0.33 * (0.15)
정부 지원 경험 (참조 집단: 있음)	없음	-0.03 (0.03)			0.06 (0.10)		
정부 지원 만족도 (참조 집단: (매우) 불만족)	보통		0.02 (0.08)			0.43 (0.24)	
	만족		0.10 (0.08)			0.59 * (0.25)	
	매우 만족		0.46 *** (0.13)			1.26 ** (0.39)	
정부 미지원 수용도 (참조 집단: 매우 부당)	모르겠음			0.08 (0.05)			-0.03 (0.17)
	약간 부당			0.04 (0.04)			0.28 * (0.13)
	대체로 타당			0.18 *** (0.04)			0.22 (0.14)
	매우 타당			0.41 *** (0.09)			0.31 (0.28)
사례 수(명)		3,938	820	3,118	3,938	820	3,118
F		4.85 ***	3.39 ***	5.16 ***	3.89 ***	2.17 ***	4.19 ***

주: \* p<0.05, \*\* p<0.01, \*\*\* p<0.001. OLS 회귀분석의 계수를 보고하였음. 괄호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임.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아동 가구원 존재, 2020년 2월 경제활동 상태, 주관적 소득계층, 지역을 통제한 결과임.

자료: 이태진 외.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p. 133. 〈표 4-21〉.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살펴본다.<sup>4)</sup> 우선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정부 지원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매우 만족한 집단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중에서는 정부 미지원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대체로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한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집단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자 중에서는 정부 지원에 불만족한 집단보다 만족하거나 매우 만족한 집단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비경험자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 ‘없음 → 있음’ 변화를 경험한 집단보다 경험하지 않은

집단이, 정부 미지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약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부 미지원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정부 미지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집단 역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대체로 근로소득이 감소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보다는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수용도가 사회통합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대체로 정부 지원에 만족할수록, 정부 미지원을 수용할수록 사회통합 인식이 높았다.

## 6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과 사회통합 인식의

4)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 인식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를 통제하지 않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면 제약상 이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서로를 통제된 분석 결과만을 보고한다. <표 12>에 나타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경험, 지원 만족도, 미지원 수용도를 통제된 상태의 영향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관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실태를 살펴본 결과 2020년 2월 전에 일자리가 있었던 취업자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19 이후 근로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등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의 강도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였는데, 대체로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받은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여 다양한 긴급재난지원을 실시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상생국민지원금과 같이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이루어졌지만,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아동 가구, 농어가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19.9%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특히 임시직·일용직·특수고용노동자, 고용주·자영업자,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경험자가 지원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는 형태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50.8%는 정부 지원에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42.9%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거나 매우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거칠게 평가하자면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집단의 일부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집단의 일부는 지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강할수록 정부 지원을 받았더라도 만족도가 낮았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수용도도 낮았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은 사회통합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첫째, 대체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받은 집단의 사회통합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사회통합을 약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대체로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의 만족도와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의 수용도가 높을수록 사회통합 인식을 강화하였다.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충격뿐만 아니라 실업, 소득 감소, 빈곤 같은 일상적인 사

회적 위험이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언급해 둔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 만족도 및 미지원 수용도와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가 관찰된 것은 전자가 후자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자가 전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예를 들어 사회통합 인식이 강한 집단이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이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거나,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수용한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㉞

## 참고문헌

김미루, 오윤해. (2020).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KDI 정책포럼, 제281호**.

남재현, 이래혁. (2020).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2(4)**, 215-241.

남재현, 이래혁. (2021).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 소득 계층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1)**, 63-95.

여유진, 오선정, 송경희, 류재린, 김상현, 김을식... 이지완. (2021 a).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종합편)**.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여유진, 우선희, 곽윤경, 김지원, 강상경. (2021b).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승호, 흥민기. (2021). 코로나19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가구 소득과 지출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정책, 28(3)**, 17-44.

이우진, 강창희, 우석진. (2022).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금이 가구 소비에 미친 영향: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 **경제학연구, 70(1)**, 53-88.

이종관.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KDI 보도자료**.

이태진, 김동진, 곽윤경, 이원진, 우선희, 김지원. (2022).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IX):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정은희, 김문길, 전지현. (2020).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코로나19의 영향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흥민기. (2020).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지출에 미친 영향. **노동리뷰, 2020년 12월호**, 21-38.

# The Economic Shock of COVID-19 and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Lee, Wonji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perceptions of social cohesion on one hand and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nd the support provided by the government on the other. COVID-19 has dealt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conomy, with one-third of those who were employed before February 2020 experiencing income losses after the onset of the pandemic. The impact was particularly severe on non-regular employees, daily-contract workers, "special-contract" employees, own-account workers, and low-income individuals. We examined survey data on the government's COVID-19-related aid for self-employed people, employment-vulnerable individuals, and low-income groups. Our findings suggest that lower income levels and higher severity of COVID-19-related economic loss are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 support received. The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was lower among those who experienced economic losses due to COVID-19. High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aid received and higher acceptance of not receiving aid were associated with a stronger perception of social cohesion. To enhance social cohesion,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social policies aimed at safeguarding people's employment and reducing poverty.